

이슈브리프 711호  
(2025. 8. 4)

## 한미 무역협상 타결의 의미와 전략적 과제

### 제711호

하경석 안보전략연구실



## 국문초록

2025년 7월 30일, 한미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 기조 속에서 새로운 무역협상을 타결하였다. 이번 합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미국이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및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수입을 약속하는 등의 일괄적 거래 구조로 체결되었다. 한국은 비록 영국(10%) 보다는 높지만, 일본, EU와 유사한 수준의 조건을 확보함으로써 미국의 동맹국 중심 통상질서 내에서 신뢰받는 파트너 국가임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2주 내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려되었던 양국 관계의 마찰을 봉합할 외교적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합의는 2018년 개정된 한미 FTA와 달리 규범 기반 협상이 아닌 패키지형 정치적 거래라는 점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과 산업 전반에 중장기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조선 등 전략산업은 관세 인상 및 OBBB 법안 등 미국 내 제조업 유인 입법과의 충돌 속에서 현지 생산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무역협상으로 한국은 관세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향후 이 합의가 진정한 외교적 자산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구조적 재편에 걸맞은 정책조정 능력과 전략적 일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한미관계, 무역협정, 관세, 복합동맹, 실용외교

## 동맹 중심의 차등적 통상질서?

2025년 7월 30일(미 동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한국과의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협정(Full and Complete Trade Deal)” 합의를 발표했다.<sup>1)</sup> 이 합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약속하고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LNG 등 에너지 품목을 추가 수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가로 이루어질 한국의 대미 투자는 2주 이내 개최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될 것임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미국산 자동차, 농산물 등의 제품에 대한 완전한 시장 개방이 이어질 것임을 밝혔다.<sup>2)</sup>

이번 한미간 합의는 이른바 ‘양자 패키지형’ 거래로, 한국은 고율 관세를 피하고 미국 시장 접근권을 유지하는 대신 실물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는 방식의 타협을 선택하였다. 이는 미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일본, 유럽연합(EU)과 체결한 ‘패키지형 무역합의’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EU는 6,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조건으로 각각 15%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선에서 타결을 이끌어냈다. 미국과 10% 관세에 합의한 영국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구조를 공유하고 있으나, 영국의 대러 제재 동참,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OBBB 법안 협력 등의 정치적 기여가 관세협상의 프리미엄으로 작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일본, EU와 동일한 15%의 관세 수준을 적용받게 되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는 대미투자과 무역수지 개선을 약속할 수 있는 국가에

1) <https://truthsocial.com/@realDonaldTrump/114944494894008041> (검색일: 2025.7.31.)

2)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쌀과 소고기 시장 등 농축산물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브리핑: 2025.7.31.)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접근이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미 투자 협상카드가 충분치 않았던 필리핀(19%), 베트남(20%)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결정이 이를 방증한다. 다만, 한미간 관세협상이 일본, EU와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진 배경에는 미국이 동맹국과의 일정한 기준선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거래를 조정하고 있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한국이 일본, EU와 같은 범주 내에서 협상을 타결한 것은 단순 수치상의 합의를 넘어, 한국이 미국의 대외 통상전략 내에서 여전히 핵심적인 국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5% 관세율은 미국이 인도(26% 유지 또는 하향 가능) 및 중국(기존 24% 유예 또는 상향 가능) 등에 부과하는 수준과는 명확히 구분된다. 물론 영국은 자동차 등 전략 품목에 대해 10%의 우대 관세율 적용에 합의하여 가장 낮은 관세율 혜택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는 경제적 측면만이 아닌 미국에 대한 영국의 전략적인 기여가 반영되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동맹 변수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역협상 결과를 놓고 보면 미국이 동맹국 중심의 차등적 통상질서를 암묵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경제질서의 구조적 변화도 감지된다.

〈표1〉 2025년 미국의 주요국 관세 협상 비교

국가	적용 관세율	대미 투자 합의	특징
영국	10%	100억불 규모 항공기 구매	에탄올, 소고기 등 개방 최저 관세율 확보
일본	15%	5,500억불 투자	자동차, 일부 농산물 개방 LNG 미일 조인트벤처 설립
EU	15%	6,000억불 투자	자동차, LNG, 방위산업 품목 중심 대규모 거래
한국	15%	3,500억불 투자 1,000억불 LNG등 구매	일본, EU 와 같은 관세율 적용으로 동맹국 수준 기본선 방어
인도	26% 상호관세 협상중 (7.29 기준)	협상중	대중국 견제의 핵심 파트너 국가임을 강조하며 느긋한 협상태도 견지
중국	24% 상호관세 유예 (7.29 기준)	반도체(미국)-희토류(중국) 수출통제 절충안 협의	구조적 갈등 지속 관세 인상 리스크 지속

## 양국 행정부 간 신뢰구축의 계기 마련

주목할 점은 이번 관세협상이 한미간 단순한 통상 합의에 그치지 않고, 외교적 상징성을 갖는 정상급 이벤트로 연결된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 직후 이재명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며, 향후 2주 내 양국 정상이 워싱턴에서 직접 만나게 될 것임을 밝혔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부에서 제기된 한미관계의 불협화음 우려를 일단락 짓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부터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 방위비 분담금, 미중 사이의 전략적 모호성 등 여러 사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해왔고, 이로 인해 한미 간 마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 타결 및 정상회담 예고는 양국이 이해관계를 실용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관계임을 재확인하는 신호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정책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한국의 “헤징(hedging) 외교”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MAGA 진영을 비롯한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이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국과 밀접히 엮여져가는 상황을 구조적 불균형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져오는 이러한 시각은,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국과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동맹의 전략적 일치(alignment)에 금이 갈 수 있다는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협의가 이러한 우려를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미국이 설정한 통상기준 내에서 한국이 “신뢰 가능한 동맹국”으로 위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점은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 통상관계의 구조적 전환

한편 이번 무역 합의는 한국과 미국의 통상관계가 기존의 자유 무역협정 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구조로의 전환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2018년 개정된 한미 FTA는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명분으로, 자동차 수입쿼터 확대, 약품가격 산정 구조개선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그럼에도 양국간 전반적인 무관세 원칙은 유지되었고, FTA 체제의 틀 안에서 상호간 의무와 협상구조가 존중되었다. 반면, 이번 무역합의는 규범적 조항이나 상호조정 메커니즘 없이 정치적 레벨에서의 일괄 거래(deal)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방식이다. 즉, 이번 협상은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의 원칙보다, 고율관세 회피를 위한 정치적 의지와 실물 거래를 결합한 패키지 거래로 평가할 수 있다.

무역협상 타결로 인한 직접적 이익은 ‘최악의 관세폭탄’을 방지하고, 미국 시장에의 접근성을 유지한 데 있다.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 치른 대가 또한 가볍지 않다. 관세율이 기존 0%에서 15%로 상승함에 따라, 그동안 무관세 구조를 기반으로 미국 수출을 확대해 온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조선 산업 등 핵심 수출 산업은 가격경쟁력 저하, 현지 생산 압박, 공급망 조정 등의 구조적 부담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의 대미투자 대상과 사용처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통제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동맹국의 자율적 정책결정 여지를 제약하는 구조를 제도화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한국이 제공할 대미 투자금은 대부분 반도체, 2차전지, 조선 분야의 미국 내 생산설비 확충 및 고용 창출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투자 이행에 있어 한국 정부나 기업의 전략적 자율성이 얼마나 확보될지는 불확실하다.

게다가 2025년 7월 발효된 OBBB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등 미국 내 제조업 부흥을 목적으로 한 규제 프레임과 중첩되는 부문에서는 한국 기업의 전략적 대응력이 약화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러한 리스크는 이번 무역협정이 일종의 ‘휴전협정’일 수 있으며, 근본적 통상환경의 안정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관세협상이라는 1차 관문을 통과했지만, 통상환경과 대미 경제교류의 구조적 장벽에 대한 대비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 외교안보적 함의와 과제

2025년 7월 한미간 무역협상은 단순한 통상합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략적 위치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보여주는 이벤트였다. 그리고 한미 양국의 전략적 관계를 재설정하는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정부는 미중 경쟁이라는 글로벌 전략구도 속에서 실용적이고 비위험적인 해법을 선택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외교적·경제적 축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그 대가는 단지 협상장에서의 합의문에 그치지 않는다. 전략산업의 경쟁력, 소비자의 부담, 자율적 통상정책 공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설정 등 복합적인 과제가 한국의 대외정책 전반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리스크에 대비해 다층적 외교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간 고위급 전략 대화를 정례화하고, 투자 집행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중국과의 외교채널을 상시 가동하고, 한중일 회의 등 다자주의 틀을 활용해 대중관계를 관리해 갈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 산업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대미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중소기업의 미시장 진출 지원, 농축산업 보호 대책 등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우리의 대외무역 레버리지(leverage)를 확보하려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한미관계는 더 이상 안보동맹만이 아니라, 경제, 기술, 산업 등 여러 층위가 얽혀 있는 복합동맹(complex alliance) 구조로 재편되는 중이다. 이러한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전략, 산업정책, 통상전략의 유기적 연계가 요구된다. 이번 무역협상으로 한국은 동맹국으로서의 신뢰를 일정 부분 회복했고, 단기적으로는 관세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향후 이 합의가 진정한 외교적 자산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복합동맹의 요구에 걸맞은 정책조정 능력과 전략적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외정책의 우선순위 재조정을 통해 대중국 인태전략에 국가의 핵심 자원을 투사하려는 미국 정부의 전략적 움직임을 잘 읽어가야 할 것이다.

2025년 한미 무역협상과 정상회담, 그리고 이에 따른 후속 행보는 한국이 대외정책의 핵심축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를 확인하는 리트머스 테스트가 될 것이다. 이 과정이 단기적인 위기회피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으로 한국의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실용 외교는 유연함을 의미하지만, 전략적 모호성과는 다르다.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가 진정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한미관계를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